

칼럼



장기재 주필

고령화를 실감하는 나라

1960년대 일본이 인구과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다마 신도시'는 수도 도쿄 남서쪽에 위치해 있다. 한 때 인구 31만을 목표로 개발된 계획도시지만 지금은 '노인들의 도시'가 돼버렸다.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젊은 인구의 도시 유출 때문이다.

초·중학교가 잇따라 폐교했고 집값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다마시에 따르면 당초 인구는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14만 7734명 수준이었다. 이 중 24.7%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 도시다. 카네코 류이치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소

장은 "아키타현, 시마네현 등의 초고령 도시에서 낮 시간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노인밖에 없다"며 "고령화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극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일본의 근저를 흔들고 있다는 말이다. 급증한 노년층 인구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력 저하, 노인부양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 시키고 있다.

문제에 대응할 수 있었던 '기회의 시간'을 놓친 일본은 뒤늦게나마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국력을 쏟았다.

이는 출산·고령화가 꺾힐 것이

다. 일본인구문제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 1995년을 최고점으로 이미 20년 가까이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5년에는 생산가능 인구가 1995년 정점 대비 1000만명 이상 줄게 된다. 젊은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던 각종 아르바이트 업종들이 채용 난을 겪고 있지만 임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직원들의 이탈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 돌봄 문제도 수면위로 떠올랐다. 요양 관련 종사자수는 2010년 말 현재 약 1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4배가 늘었지만 여전히 수요 대비 크게 모자라는 실정

이다.

노인의 고독사와 각종 노인범죄도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인구 절벽에 대한 경종이 울렸음에도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수렴해 "50년 후 1억 명 정도의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한다"는 문구를 중장기 경제·재정 운영 방침에 명기 하기로 했다.

경제·재정 운영의 기본 방침을 인구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의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뒤늦게나마 '시대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이면 20.8%가 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의 문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 수준과 맞물려 미래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노후 소득보장 제도가 미흡하여 노인빈곤문제가 심각하며 노인 자살율도 OECD 국가 중 최고로 높아 노후 삶의 질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인구고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전략 하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채택되고 있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늦게 은퇴하며,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가 핵심 기조라고 한다.

따라서 100세 시대의 도래를 대비하여 우리사회는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공동적 대응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 늙어가는 노년기를 '여성'으로 생각하며 소극적인 인식을 버리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려는 도전과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사회, 개인의 보다 다각적인 대응 노력이 모아져야 한다. 그래야 길어진 노년기 젊은 이는 물론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 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정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도심 자전거 무단투기, 혈세 낭비 불러

최근 코로나 시대에 밀집 장소에서의 운동이 어려워지면서 야외 자전거도로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 타기 웰빙 열풍이 주민들 사이에 급속히 퍼지고 있지만 실상 도심지역 외진곳에 장기간 아무렇게나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미관을 찌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도심 곳곳에는 라이더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아파트,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공장소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문제는 일부 자전거 보관대에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로 인해 도심 미관까지 해치는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자전거 보관대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상당수는 대부분 소유자가 쓸모가 없어 버린 듯 파손되거나 녹이 쓴 상태여서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는 자전거들도 상당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작 운동 등 실 생활에 자주 이용하는 자전거가 마땅히 세워둘 곳이 없게 되

는 주민들의 불편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이러한 탓에 도심지역에서 자전거 보관대 대신 도로등이나 전봇대를 이용해 자전거를 보관하는 모습을 보는 광경도 낯설지 않다.

얼마전 접한 언론에서는 일부 비양심적인 자전거 소유자들이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무렇게나 자전거를 무단투기 하면서 자전거 수거와 처분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는 가히 씁쓸한 생각마저 남긴다.

여기에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 상당수가 미관을 고려하여

인적이 뜸한 외딴 후미진 곳에 설치해둔 경우가 많다보니 도난사건도 발생할수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버려진 자전거 폐기 등 수거와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된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반복되는 자전거 무단투기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기대해 본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